

종 무 처

국무총리지시제 9호

(72-9824)

1969. 12. 22

수신 수신처 참조

제목 인허가 사무개선 보고

각종 인허가 사무 가운데 비능률적이고 불합리적
적인 사무절차를 폐지·통합·이양·위임 함으로서
국민에게 주는 불편도를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고
행정의 경제성·능률성을 높여 효율적인 행정체제를
갖추고자 별지와 같이 지시하니 개거 인허가 사무
를 면밀히 연구 검토하여 별첨 서식에 의한 개선안을
1970. 1. 30 까지 종무처장관 경우 보고할 것.

유첨 : 인허가 사무개선 작업지침 1부. 끝.

국 무 총 리

수신처 : 가 (-, 1, 2, 3, 4, 5, 6, 7, 8, 9, 30, 34, 39)

승.공.없.이 자.우.없.고
방.첩.없.이 평.화.없.다

인허가사무개선 작업 지침

1. 폐 지

인허가 사무 가운데 시기에 맞지 않거나

필요한 것 또는 사회적, 지역적 발전요

저해하는 인허가나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것

로 폐지 하셔도 행정수행에 지장이 없는 것

은 폐지할 것.

가. 다른 인허가 또는 다른 방법으로 그 목적

이 가능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

나. 자체의 목적이 소멸하였거나 여건이 변동

된 것.

~1~

~2~

다. 행정기관의 편의단을 고려한 것.

라. 일부 국민 또는 기독교인의 권의 보호에
부당하게 편중된 것.

마. 규제대상과 등질적인 것 중 규제가 있어도
사회적 혼란 또는 행정수행에 지장이 있는
것. (사회통념화된 것)

바. 기타 형식적 기계적인 처리 또는 부안의
심사와 관련이 없는 구비서류를 첨부하게
하는 것. (구비서류 폐지)

2. 통 합

동일 또는 유사한 대상을 이중으로 규제하지
나 주관기관이 다르기는 이유만으로 사실상
동질의 대상을 두개 이상의 기관에서 규제하

고 있는 것은 인허가의 처분이 어느 기관에
서 주관 하던간에 그것은 국가의 의사를 대

나 주관기관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상

동질의 대상을 두개 이상의 기관에서 규제하

고 있는 것은 인허가적 처분이 어느 기관에

서 주관 하던간에 그것은 국가의 의사를 대

표하는 것으로 동일한 행정대상에 대하여 두

개의 국가의사를 유보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

는 이론상으로도 부당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국민의 부담을 가중 시킨다는 것은

국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어

느 한쪽을 폐지하여 통합하고 행정기관 간에

는 내부처리로써 행정목적은 달성하도록 하여

야 할 것임.

가. 동일 또는 유사한 대상을 이중 규제하고

있는 것.

나. 목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동일 또는 유사한

대상을 2개 기관 이상이 관장하고, 있는 것.

다. 주된 인허가에 흡수하여도 행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부수 인허가 사무.

3. 이 양

하부기관에 이양하여도 행정목적 달성을 수 있거나 사실상 내부위임을 하여 하부기관에서 처리되고 있는 것 또는 사실상 하부기관에서 관장하고 있으면서 다만 상부기관의 소관으로 되어 있는 것 등은 그 권한을 하부기관에 이양하여 인허가 사무의 간소화, 처리기간의 단축등으로 효율적인 업무집행을 하도록 한다.

가. 실질적으로 하부기관이 관장하고 다만 상급

기관의 소관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

죽등으로 효율적인 업무집행을 하도록 한다.

가. 실질적으로 하급기관이 관장하고 다만 상급

기관의 소관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

나. 내부위임을 하여 사실상 하급기관에서
되고 있는 것.

다. 현직조사를 하급기관에 일임하고 있거나
는 하급기관의 내신에 따라 처리되고 있는
것.

라. 주제사항이 경미하거나 그 처리방법이 기
적인 것.

마. 일정지역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

4. 완 화

필요 이상의 구비서류 또는 경우제도가 있거나
처리기간의 장기, 과중한 부담금, 기타 보고

나 신고로서 가능한 것등을 장하게 주제함으
로서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것을 완화할 것.

가. 일정요건이나 서류의 심사 또는 사실의 판

단만으로 제한 없이 처분하고 있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을 강하게 규제하고 있는 것.

나. 인허가 사무에 첨부되는 부속서류에 대하여는
그 필요성을 재 검토하여 첨부서류를 대폭
폐지 및 간소화할 것.

다. 서류의 제출을 우편으로 할 수 있는거나 보
고 또는 신고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을 강하게 규제한 것. 끝.

보고상유의사항

1. 인허가 사무명 (단위 사무)

각급 판서가 관장하고 있는 인허가 사무의 종류별로 그 명칭을 쓴다.

예: 기술사등록 (경제기획원).

세관화물 취급인허가 (재무부)

양곡 가공업허가 (농림부)

2. 근거

인허가 사무의 법적근거

예: 기술사등록 — 기술사법 제7조.

세관화물취급인허가 — 관세법 제173조

양곡가공법 — 양곡관리법 제18조 등

으로 표시한다.

~10~

3. 인허가 사무의 폐지·통합·이양·완화 가부

예 : 기술사 등록 폐지.

양곡가공업 허가 이양.

세관 하물 취급인 허가폐지·통합·이양.

완화불가.

4. 폐지·통합·이양·완화할 경우 조치

예 : 기술사등록 폐지의 경우 기술사법 폐지.

양곡가공업 허가를 이양할 경우 양곡관리법 개정

5. 불가할 경우 그 사유

폐지·통합·이양·완화등이 불가할 경우 구

체적인 사유를 쓴다.

6. 처리 기간의 단축

이러한 이유의 처리기간을 단축

할 경우 구체적인 기간을 쓴다.

체적인 사유를 쓴다.

6. 처리 기간의 단축

인허가 사무의 처리기간을 단축할 경우 구체적인 기간을 쓴다.

예 : 양곡 가공업허가 7일 - 5일로 (2일단축)

7. 수임자

인허가 사무를 이양할 경우 수임자를 쓴다.

예 : 농림장관 - 도지사로

본 조서는 판장 기관별로 별지로 작성한다.

예 : 채신부 본부 소관 / 통

채신청 소관 / 통

전파관리국 소관 / 통

우체국 소관 / 통 등

一
 二
 三
 四
 五
 六
 七
 八
 九
 十
 十一
 十二
 十三
 十四
 十五
 十六
 十七
 十八
 十九
 二十
 二十一
 二十二
 二十三
 二十四
 二十五
 二十六
 二十七
 二十八
 二十九
 三十
 三十一
 三十二
 三十三
 三十四
 三十五
 三十六
 三十七
 三十八
 三十九
 四十
 四十一
 四十二
 四十三
 四十四
 四十五
 四十六
 四十七
 四十八
 四十九
 五十
 五十一
 五十二
 五十三
 五十四
 五十五
 五十六
 五十七
 五十八
 五十九
 六十
 六十一
 六十二
 六十三
 六十四
 六十五
 六十六
 六十七
 六十八
 六十九
 七十
 七十一
 七十二
 七十三
 七十四
 七十五
 七十六
 七十七
 七十八
 七十九
 八十
 八十一
 八十二
 八十三
 八十四
 八十五
 八十六
 八十七
 八十八
 八十九
 九十
 九十一
 九十二
 九十三
 九十四
 九十五
 九十六
 九十七
 九十八
 九十九
 一百

판정기판

[illegible]

22

225